대선후보에 '반부패 12대 정책' 제안

시민단체,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 천명'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 복원' 등 강조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 복원' 등 반부패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은 '반부패 과제'를 체계적인 정책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정부패로 탄핵돼 불가피하게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무너진 국가반부패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먼저 차기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부패와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반부패 척결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구협의회를 복원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반부패 전담기구의 설치와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 ▲반부패 공공·기업·시민 협력 거버넌스 복원 ▲회계검사 기능과 시민감사의 확대 ▲주요 정부기관 회의록 공개 의무화 ▲공익제보자보호제도 강화 ▲청렴교육 인프라 확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제도 정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청탁금지법 정착 등 12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오전 노동당도 국회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대선 후보에게 토론회 참가 횟수 등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번 대선에 역대 최다 인원인 15명의 후보가 등록됐으나 현재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은 5명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의 정견을 제대로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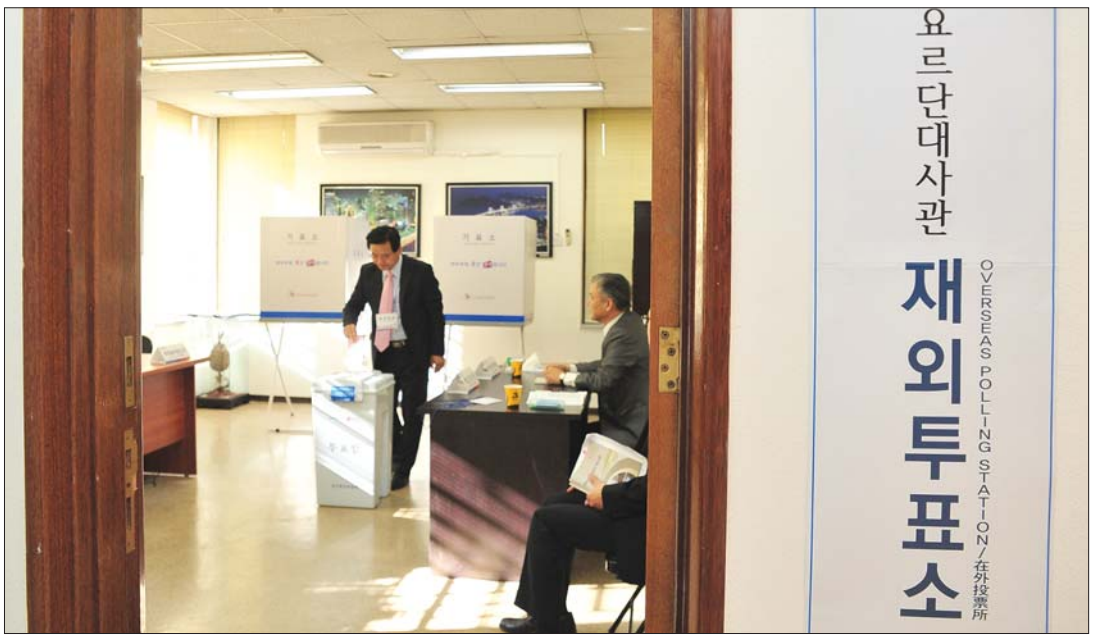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공중파, 종편, 선관위 등이 주관하는 총 6번의 토론회 중에 군소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동당은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회 초청 기준도 공직선거법의 규정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네 번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에서 세 번은 5명의 초청 후보로만 진행되며, 한 번은 10명의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가 기탁금 3억원을 똑같이 내는데 이른바 '메이저 리그' 와 '마이너 리그' 식으로 대선 후보를 나눠 TV 토론회를 실시하고, 참가 횟수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공직선거법 제 82조를 개정해 모든 대선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2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요르단 암만 주 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는 25일부터 30일까지(6일간) 진행된다.

최인정 의원, 학교운영지원비 문제점 개선 끌어내

도교육청, 개선안 마련 · 시행… 올해부터 70%만 감액 · 2019년부터 전액 교부 방침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도내 일선학교의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북도의회 최인정 의원은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 배정할 때,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만큼 감액.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원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성회비라 불리던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와 사용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의 일종으로 보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조정하고 있었다.

이에 최인정 의원은 지난 1월 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도교육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빼앗는 행위"라면서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 수입으로, 학교회계에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76억5253만원의 감액교부액 중 70%인 53억5677만원만 감액.지원하기로 결정해, 30%인 22억9576만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정규모가 큰 학교는 추경을 통해 약 1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오는 2018년도에는 감액률 20%, 2019년부터는 감액 없이 학교기본운영비 전액을 교부할 방침이다.

최인정 의원은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사정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통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충원, 운동부 육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 등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춘석 의원, 웅포 해지천 특교세 5억 확보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던 웅포면 해지천 일대가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농가 피해는 물론 주민 안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5일 '웅포면 해지천 하류 정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해지천은 전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될 예정이기는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언제 사업대상에 포함될지조차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지역에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상습침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직접 사태의 시급성을 전달하고 특교 배정을 요청했다.

총 10억 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항을 반영해 가장 시급한 배수갑문 설치와 인근에 방치된 노후교량 철거,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춘석 의원은 "농가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탓에 가뜩이나 힘겨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더욱이 주민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된 이 같은 사안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속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재용 기자

국민의당 여성위, 홍준표 후보 사퇴 요구

국민의당 전북선대위 여성위원회 및 전.현직 여성의원들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사실을 버젓이 자서전에 써놓은 것은 자질부족이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드러낸 꼴"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바른정당, 정의당 후보들도 한 목소리를 낸 반면 문재인 후보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가 성평등 공약까지 내세웠는데 성범죄 모의를 떠벌인 후보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나란히 같이 가겠다는 것이냐"며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발표를 맡은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당 소속 전북 전.현직 여성의원 및 여성위원회 소속 여성당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재용 기자

文측 "安, 취업특혜 허위사실 유포자 징계 · 사과를"

文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5일 국민의당이 고용정보원 전반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안철수 대선후보는 즉각 허위사실 유포자를 중징계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인척 권모씨가 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단장은 "(국민의당이) 언론 보도가 이뤄진 후 뒤늦게 권 여사 부분을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끝내 공식적으론 취소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라도 일단 질러 놓고 보자는 저질스러운 술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안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불과 사흘 전"이라며 "안 후보가 TV토론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며 '셀프 네거티브'를 한 게 이틀 전"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어제 '방송 토론에선 네거티브 공방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놓고 같은 날 곧바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입만 열면 '네거티브 중단하자'고 하면서 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은 허위 사실 유포로 전임 대통령 가족을 욕보이는 게 안 후보의 새정치냐"고 되물었다. /뉴시스